



조간 제 8081호 대표전화 062-370-7000

# 광남일보

GwangNam.co.kr



2026년 5월 11일 월요일 (음력 3월 25일)

## 특별법에 빠진 '특례', 후속 입법 안되면 '무늬만 통합시'

### 해상풍력·영농형 태양광·군공항·의대 등 11개 현안 제외 에너지·농지·의료 분야 직결...산업 경쟁력 좌우할 변수 시·도, 지원위원회·개별 법 개정 통해 단계적 반영 추진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특별법에 담기지 못한 핵심 과제들을 후속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통합의 틀을 갖추는 데서 나아가 산업·의료·에너지 등 지역의 구조적 현안을 풀어낼 실질적 권한 확보가 뒤따르지 않으면 통합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은 5면 13장 3절, 408개 조문과 16개 부칙으로 구성됐으며, 이 가운데 특례만 394개에 달한다. 특별법은 인구 감소 대응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기반으로 인공 지능(AI)·반도체·에너지·모빌리티 중심의 산업 생태계 전환에 초점을 맞췄다. 초광역 자치권 보장과 재정·규제 특례, 지역 개발과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을 제도적

으로 뒷받침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이처럼 대규모 특례가 반영되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운영의 기본 틀은 마련됐지만, 광주·전남지역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일부 핵심 현안은 입법 과정에서 제외됐다. 특히, 해상풍력, 농지 규제, 군공항 이전, 국립의대 설립 등 11개 특례는 특별법에 담기지 못한 채 별도의 법률 개정이나 정부 정책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미반영 특례는 통합특별시의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이다. 전남의 핵심 전략 산업으로 꼽히는 해상풍력은 발전단지 조성 및 함께 전력을 수송하는 계통망 구축이 필수지만, 공동접속설비에 대한 국가 책임과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 속도에 제약이 불가피하다. 대

규모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갖추더라도 송전망이 뒤따르지 않으면 산업화로 이어지지 어렵다는 점에서 국가 전력망 차원의 접근이 요구된다.

농업 분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과 농지 규제 완화 부분이 빠졌다.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농지 전용허가 기준이 엄격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농가 소득 보전을 동시에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농촌활력촉진특구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실제 투자와 개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특례가 필요하다. 분석이다. 산업전환 특구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특례 역시 광역권과 대불산단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비용 구조를 낮추는 장치로 거론된다.

광주·전남 공동 현안인 군공항 이전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전 비용 증가와 재원 분담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져 온 만큼, 국가가 초과 사업비를 책임지는 구조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별도 특별법 개정을 통한 국가 책임 강화 논의가 불가피한 이유다.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역시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직결된 사안이다. 전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으로, 의료 인력 부족과 응급의료 공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통합특별시 체제에서 의료 기반 확충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광주·전남 의료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정

책 반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밖에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확대와 절차 간소화, 북극항로 거점항만 지정·육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범위 확대, 사회 복지 국고보조금 집행 특례 등도 통합특별시의 기능을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도시 확장과 산업 입지 확보, 물류 경쟁력 강화, 문화·복지 체계 개편과 맞물린 사안인 만큼 단순한 지역 권위를 넘어 광역 경제권 형성의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이들 과제는 대부분 개별 법률과 중앙부처 정책에 걸쳐 있어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별도의 입법과 협의가 병행돼야 한다.

▶2면서 계속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39년 만의 '헌법 개정' 시도 무산

### 국민 필버 예고에 우 의장 재상정 방침 철회

39년 만의 헌법 개정 시도가 무산됐다. ▶관련기사 8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6당이 6·3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개헌을 추진했지만 국민의힘이 지난 7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음에 이어 8일 개헌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안 재상정 방침을 철회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가 개의된 직후 "어떻게든 개헌을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 오늘 다시 본회의를 열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응급하는 것을 보니 더 이상의 사진행이 소용이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의장은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며 "오는 6월 3일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절차는 오늘로써 중단됐다"고 선언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39년 만에 하는 헌법 개정안, 비상계엄을 꿈도 못 꾸게 하는 개헌안에 대해 국민의 힘은 어제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무산시키고, 오늘은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고 하니 의정으로서 모든 절차를 중단한다"며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이 발의한 개헌안은 지난 7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됐다.

국민의힘은 개헌안 처리 시도 자체를 "선거용 전략"이라고 비판하며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펴며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개헌안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조차 하지 못 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 2020년 민주당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민발안 형식으로 내놓은 개헌안도 같은 사유로 무산됐다.

개헌안 의결 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 286명의 3분의 2(191명) 이기에,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앞서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여야 6당과 무소속 6명은 지난달 3일 개헌안을 발의했다.

이에 우 의장과 민주당은 이날 다시 한번 개헌안을 재상정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은 개헌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10일 광주 서구 광주 민심캠프 사무소에서 열린 '전남광주대통합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가 함께 두손을 맞잡고 인사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민형배 "경제 대도약 이뤄 '더 큰 전남광주' 실현"

### 선대위 출범... 정청래 대표·지역 국회의원 등 200명 참석 주요기 삼성전자 교문, 경제특별고문 합류... AI 전략 강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10일 광주 민심캠프 사무소에서 '전남광주 대통합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지방선거 본선 체제에 들어갔다.

선대위 출범식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지역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시민사회·노동·산업·청년·농어민·문화예술계 인사 200여명도 참석해 통합특별시의 성공

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정청래 대표는 축사를 통해 "민형배는 김대중의 민주주의 정신, 노무현의 국민 통합 정신, 문재인 의 한반도 평화 정신, 이재명의 실시간 정신을 한 몸에 갖고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적임자"라며 "당원동지를 모두 민형배의 손발이 되고 심장이 돼 전남광주 통합의 새역사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출범한 선대위는 시민주권·미래도약·원팀 3개 축으로 구성됐다. 시민 주권자로서의 의제를 발의하고 실현을 이끌어 내는 수평적 참여 구조를 전면에 녹여냈다.

특히 선대위의 경제특별고문으로는 주은기 삼성전자 교문(전 삼성전자 부사)이 참여. AI·에너지 등 미래산업 중심의 전남광주 대통합을 함께 설계한다.

후원회장에는 민주당 이광재 경기 하남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와 정성태 전남대 총장, 양동호 투계터광산 나눔문화재단 이사장이 이름을 올렸다.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김원일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 주철현 국회의원, 박기영 순천대 교수가 맡았다. 상임선대위원장은 박기영 의원을 비롯한 전남·광주 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한다.

민형배 후보는 "전남광주의 성공이 곧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될 것"이라며 "기업이 몰려오고 청년들이 더 이상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경제 대도약을 반드시 이뤄 '더 큰 전남광주'를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내가 살고 싶은 지역 투표로 만듭니다

자세한 선거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누리집(nec.go.kr)에서 확인하세요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을 위해 정책과 공약을 꼭 살펴보고 투표하세요

### 선거일 투표

일시 | 6월 3일(수)  
오전 6시 ~ 오후 6시

장소 | 지정된 투표소  
\* 거주지로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사전 투표

일시 |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장소 |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

### 지방선거 투표용지 가이드

지방자치단체장	사·도지사 선거	구·시·군·의정선거		
지방의회의원	사·도 의원선거 (지역구)	구·시·군 의원선거 (지역구)	사·도 의원선거 (비례대표)	구·시·군 의원선거 (비례대표)
지방교육자치	교육감 선거			
세종·제주 (4장)	교육감선거, 사·도지사선거, 지역구·사·도의원선거, 비례대표·사·도의원선거			

\* 일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계 보궐선거도 함께 실시

---

### 지방선거 투표 전 체크리스트

- ☑ 일정 확인하기
- ☑ 내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 확인하기
- ☑ 신분증 챙기기
- ☑ 유의사항 확인하기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안됩니다.  
▶ 투표할 때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며, 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지를 하면 무효가 됩니다.  
▶ 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 사전투표를 한 후 선거일에 그 사실을 숨기고 다시 투표할 수 없습니다.  
▶ 투표지를 찢는 등 훼손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